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1231 지방세경정불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가 202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958,940원, 지방교육세 1,110,610원, 농어촌특별세 672,000원의 경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8. 원고의 아버지인 B과 ○○시 C 답 2,302㎡ 중 2302분의 115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증여자 B, 수증자 원고)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7. 8. 피고에게 시가표준액 324,191,4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46,690원, 지방교육세 972,570원, 농어촌특별세 648,380원 합계 12,967,64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2. 4. 1.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증여자 B, 수증자 원고)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2차 증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22. 5. 16.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11,346,690원, 지방교육세 972,560원, 농어촌특별세 648,370원 합계 12,967,620원을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하자, 원고와 B은 2022. 12. 27. 1차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다는 내용의 해제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는 이중부과임을 이유로 취득세 12,958,940원, 지방교육세 1,110,610원, 농어촌특별세 672,00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1. 30. 원고에게, 1차 증여계약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성립한 이상 2차 증여계약과 무관하게 1차 증여계약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고가 제출한 1차 증여계약에 대한 해제증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단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정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차 증여계약과 2차 증여계약은 동일한 당사자인 원고와 B이 동일한 물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인바, 비록 원고가 2회에 걸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1차 증여계약과 2차 증여계약은 일련의 증여의사로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증여계약 체결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상, 중복하여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



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1차 증여계약과 2차 증여계약은 모두 증여자가 B, 수증자가 원고, 증여대상이 이 사건 토지로 동일한 점,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있는 B과 원고가 같은 토지에 대하여 별개의 증여의사로 2차례에 걸쳐 증여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B에서 원고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목적을 실현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등으로 1차 증여계약과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 당사자 사이에 약 9개월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동일 물건에 대한 1차 증여계약 및 2차 증여계약은 하나의 증여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는, 원고가 1차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은 1차 증여계약이 2차 증여계약과 별개의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1차 증여계약에 대한 해제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루어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각 증여계약별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차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재차 취득세 등이 부과되자, 1차 증여계약과 2차 증여계약이 하나의 증여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1차 증여계약에 대한 해제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1차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그 해제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1차 증여계약과 2차 증여계약이 별개의 계약이고 각 계약별로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1차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해 1차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증여의사에 의한 1차 증여계약 및 2차 증여계약이 이루어지고, 2차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신고·납부된 사안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주○○

판사 남○○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끝.